

광주·전남 소방관들 울산·경북·경남서 '산불 사투'

SOCIETY

2025년 3월 27일 목요일

지역 보유 장비 97대·대원 428명 화재 현장 파견 사상자 50명 발생·진화 헬기 추락 등 피해 잇따라

“한 곳의 불을 끄고 오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의 연속입니다. 거센 불길과 연기, 파편이 뒤섞인 강풍으로 화재 진압이 힘듭니다.”

울산·경북·경남 등을 덮친 화재 진압을 위해 파견된 광주·전남 소방관들이 산불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범시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협조를 당부했다.

26일 광주·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소방본부의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장비 59대, 대원 147명(오전 6시 기준)을, 전남소방본부는 장비 38대, 대원 281명(오전 10시 기준)을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등에 투입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4년 차인 김영현 나주소방서 이장119 안전센터 소방관은 “25일 오후 5시10분 경북 영덕으로 출동하라는 지령을 받았다”면서 “나병기 소방위와 함께 교대 운전을 하며 오후 11시40분 경북 영덕종합운동장에 도착한 뒤 영덕 도심천 둔치 주차장으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도착하자마자 화재 현장에 바로 투입됐다.

김영현 소방관은 “경북 영덕까지 이동할 때 주변 곳곳에 산불이 발생했다”며 “도착 순간부터 아파트, 차량, 창고 관련 8건의 화재 진압했다. 불길을 잡는 데만 4~5시간이 걸렸다”고 전했다.

이어 “소방차 1대가 보유한 물 3000ℓ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인근 소화전 또는 집결지에서 물을 보충하는 시간(10~15분)에만 휴식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며 “부산·대구·강원 등 전국 소방관이 산불 확대를 막고자 산 능선에 물을 계속 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소방관은 산불을 지켜보는 주민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김 소방관은 “어쩔 줄 몰라 하는 대피 주민들을 보면 계속 도와드리고 싶지만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는 지령이 떨어지면 발걸음 돌릴 수밖에 없다. 발걸음이 무겁다”며 “오후 3시 나주에서 소방관 2명이 교대하러 오기 전까지 펌파 물에 젖고, 피곤하지만 불을 끄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

다”고 다짐했다.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불길에 국립공원공단 역시 화재 예방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무등산국립공원은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순찰 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있으며 현수막, 전광판을 활용해 흡연 금지·인화물질 소지 금지 등을 안내하고 있다.

최근 고성능 산불진화차 1대를 도입해 총 산불진화차 4대를 운영하고 있다.

국립공원 내 산불 발생은 탐방객의 실화나 인근에 거주민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입산 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 관계자는 “입산할 경우 라이터나 인화물질을 절대 소지하면 안 된다”며 “산불이 의심되면 즉시 국립공원사무소 또는 119에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는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사상자 수가 50명으로 잠정 파악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24명, 중상자 12명, 경상자 14명이다. 지역별 피해 규모를 보면 경북 의성에서 사망 20명, 중상 7명, 경상 8명 등 35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또 26일 경북 의성 산불 현장에서 진화 헬기 1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사고 헬기를 몰던 기장 A씨(73)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태경 기자 sty1235@gwangnam.co.kr



26일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에서 소방대원들이 불에 탄 건물 위에 물을 뿌리고 있다. 이번 화재로 국가 지정 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 가운루와 연수전 등이 소실됐다.

오늘의 날씨

예보 06:28 | 날씨 04:35
맑음 18:49 | 날씨 15:08



광주	7~25
목포	7~22
여수	10~16
순천	8~22
구례	7~25
광주	5~22
임도	7~20
진남	8~16
고풍	6~19
진도	5~19

목포	미물(고)	11:49 / --:--
	샘물(저)	04:49 / 17:47
여수	미물(고)	07:26 / 19:23
	샘물(저)	00:32 / 13:33

경찰 다리 깨문 음주운전자

만년필... 음주단속하는 경찰의 다리를 깨문 30대 운전자에게 징역 2년이 구형돼.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영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재판을 종결.

A씨는 지난해 11월2일 광주 남구 한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공격한 혐의 등으로 기소. 당시 A씨는 음주측정을 하려는 경찰의 요구에도 차라 문을 열지 않고 격렬히 저항했다고.

특히 A씨는 도주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추격하는 경찰관의 다리를 5분간 깨물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져. 검사는 이날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

한편 재판부는 오는 4월25일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기로 결정. 임영진 기자 looks@

‘신생아 매매’ 30대 친모 징역 3년 구형

아동매매법 위반 혐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생후 3개월된 딸을 100만원에 매매한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영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36·여)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수 명령과 취업제한 5년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에 생후 3개

월 된 딸을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100만원을 받고 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산 직후 자녀를 키울 수 없다는 이유로 광주 영아 임시보호소에 맡겼던 A씨는 친부(현재 사망)와 함께 매수자를 찾아 나섰.

이후 A씨는 임시보호소에서 아이를 찾으며 ‘부모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까지 썼으나 임시보호소 정문에서 아이를 바로 팔았다.

A씨의 범행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임영진 기자 looks@

‘불나방’ 산불진화대, 고령화에 우려 목소리

낮은 임금·단기 계약직 수준... 젊은층 참여 꺼림 전문성·지속성 담보 안돼... “전문인력 채용 필요”

건조한 날씨에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 나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하 진화대원)의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산불 예방과 초기 산불 진화, 뒷불 잡기, 산불 진화 등을 업무로 하는 진화대원들이 고령인 데다 전문성까지 떨어지기 때문이다.

26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지난 2003년부터 도입한 제도. 각 지자체가 6~7개월 가량(여름철 제외) 선발·운영한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광주·전남 지역에서 활동한 진화대원은 총 3860명(광주 411명·전남 3449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322명(광주 140명·전남 1182명), 2023년 1290명(광주 141명·전남 1149명), 2024년 1248명(광주 130명·전남 1118명)으로 해마다 1200명여가 넘는 진화대원이 활동했다.

올해도 1181명(광주 95명·전남 1086명)을 진화대원으로 선발했다. 문제는 진화대원의 연령대가 60대 이상 고령층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선발 인원의 연령대는 20대 58명(1.5%), 30대 79명(2.04%), 40대 327명(8.47%), 50대 1297명(33.6%), 60대 이상 2097명(54.3%) 등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 발생 시 진화 업무를 신속히 수행하기에 강한 체력과 신속한 판단력이 요구되지만 대원 10명 중 9명이 50대 이상 고령층이다.

진화대원의 고령층 집중 현상은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산림청에 기재된 현황을 보면 지난 2023년 9604명 중 82.2%인 7897명이 5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50대 미만 연령층의 수는 1707명으로 17.7%. 이중 30대는 83명, 40대는 529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진화대원이 단기 계약직이고 급여도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일당 8만원) 수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경남 산청 화재로 숨진 진화대원 4명 중 3명도 60대였다.

고령화와 인력수급 문제가 겹치며 전문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진화대원은 일자리사업의 일종으로 여겨지면서 산불 진화보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보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고, 단기 계약직이다 보니 역량 강화 교육을 하더라도 지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모집공고에 ‘취업 취약계층’을 우대하고, 고소득자(기준 중위소득 70% 초과·재산 4억원 이상)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도 이런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근무 기간이 짧고 급여도 적다 보니 젊은층에서 지원을 꺼리는 것 같다”며 “효과적인 산불 예방과 진화를 위해 지자체에 산불을 관리하는 전문인력을 직업군으로 만들어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뇌물 수수 의혹’ 김산 무안군수 무혐의 처분

8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김산 무안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송치된 김산 군수를 불기소 처분했다.

김 군수 등은 지난 2022년 처리된 지방선거 직전 8억원 상당의 관공공사 물품계약 과정에서 10%에 해당하는 8000만

원을 뇌물로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해당 자재는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직접 생산했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납품됐다.

이에 검찰은 김 군수가 선거자금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했지만, 공무원, 업체 관계자와 공모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임영진 기자 looks@



만남, 당신에 이상형!

바로연

에서 인연을 만나다.

초혼·재혼 결혼전문업체 바로緣 1644-5432/062.381.000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173 대영빌딩 3층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

광주·서구·국내·09·0005호

‘만남’에 우연이란 없습니다.